

중국 진출 법률가이드-①



현지법인 설립 관련 법률제도 및 유의점

2014년 11월 5일

LIFANG & PARTNERS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MERCIAL LAWYERS

www.lifanglaw.com

Email: info@lifanglaw.com



1. 현지법인의 종류

■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

-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혹은 자연인이 중국의 기업 혹은 기타 경제조직과 함께 중국 내에서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회사형태의 기업임.
- 각 출자인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며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서 이익을 배분하고 리스크를 분담함.
- 일반적인 정황하에서 중국적 자연인은 합자기업의 출자인으로 될수 없음. 외국측 출자인이 합자기업에서 차지하는 지분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經營企業)

- 1980년대에 중국정부가 화교계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투자형태임.
- 기업의 경영권 지배, 이익 배분, 리스크 분담, 잔여재산 회수 등 사항을 출자비율이 아닌 출자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약정하게 됨.
- 법인형식을 채용할 수도 있고 비 법인형식을 채용할 수도 있으나, 그 운영구조, 책임부담 등에 불명확한 점이 너무 많기에 현재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음.

1. 현지법인의 종류

■ 외자기업(外資企業)

- 외상독자기업(外商獨資企業)이라고도 부르며, 모든 자본이 외국의 기업, 기타경제조직 혹은 자연인의 투자로 설립된 유한회사형태의 기업임.
- 외상투자기업 중 그 지분관계가 가장 명쾌하고, 외국 출자인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단, 합자기업이나 합작기업의 경우처럼 중국측 출자인의 협력을 받을 수 없기에 정부부서와의 의사소통, 인맥구축 등 면에서는 일정한 애로가 있다는 단점도 존재함.

■ 외상투자기업 설립현황

- 실무상에서는 합자회사와 독자회사의 형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임.
- 1980년대에 외국기업의 중국진출은 약 80%가 합자기업의 형태를 채용하였으나 합자기업의 경우에는 중국측 출자인과 분쟁이 다발하는 면도 있고, 중국의 WTO가입과 더불어 시장개방과 투자환경 개선이 이루어졌기에 외국기업의 중국진출형태도 합자기업으로부터 독자기업으로 이행하는 경향이 가속화 되고 있음. 현재 중국 내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 총 수량에서 차지하고 있는 합자기업의 비율은 약 30%에 불과함.
- 한국과 중국의 기업경영인들은 성격, 관리이념, 가치관 등 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에, 중국 법률상에서 외상독자기업형태로서의 진출이 금지되어 있는 업종 혹은 한국측 출자인의 능력만으로서의 사업전개가 도저히 무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지법인은 외상독자기업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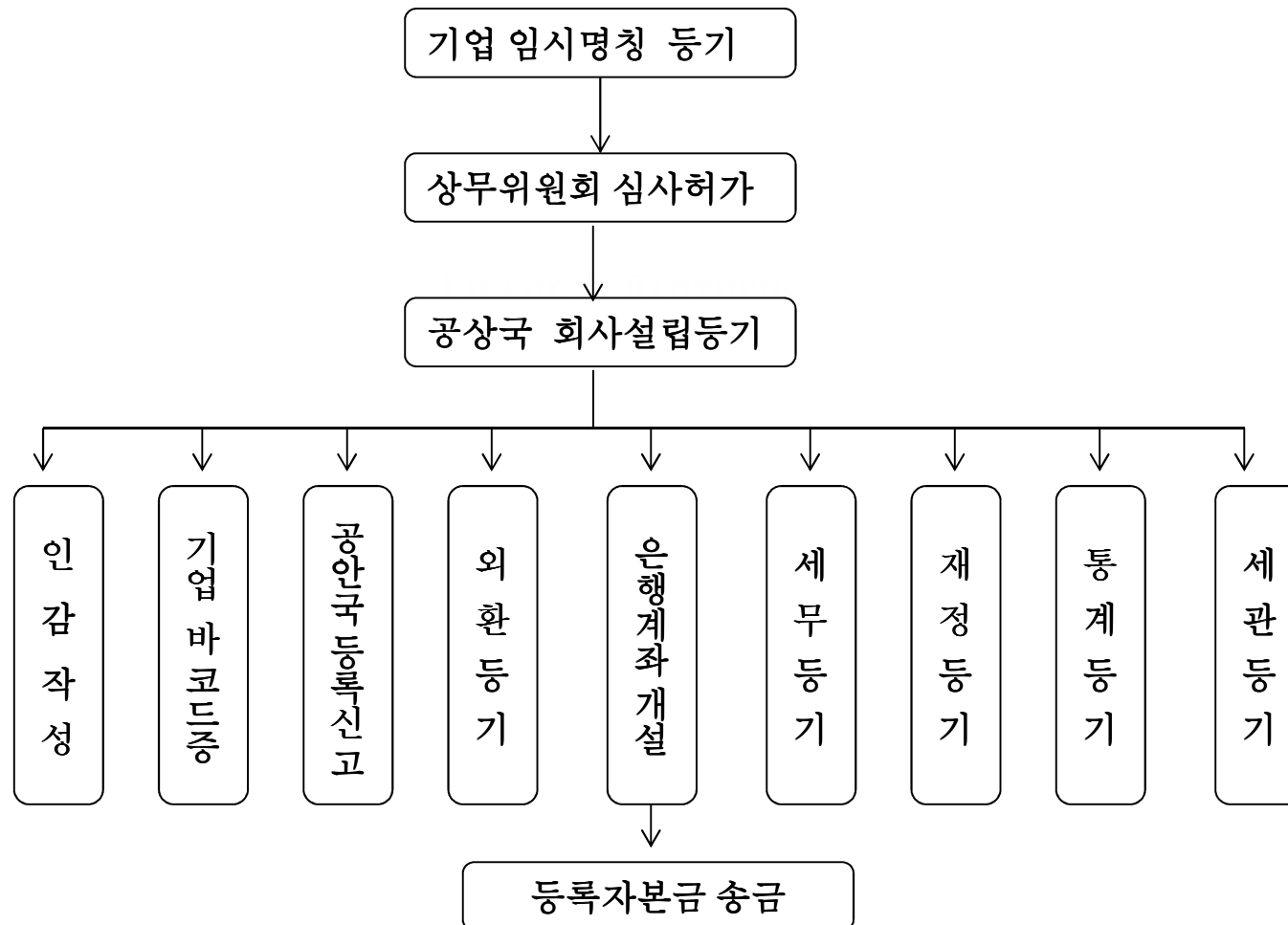
2. 진출업종에 따른 차별적 대우



- 중국에는 외국자본유치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으로서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상투자방향 지도규정>(투자 가이드라인) 및 <외상투자산업 가이드 목록>이라고 하는 투자업종별로의 구체적인 규정이 있음.
- 투자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업종은 장려유형, 허가유형, 제한유형 및 금지유형 등 4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이러한 분류에 의해 각 업종에서의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난이도나 조건, 경제상에서의 우대정책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음.
- 장려유형은 세무 등 면에서 혜택을 받는 외에, 외국측 출자인의 출자비율에 대한 제한도 적고, 설립절차의 심사,허가에 있어서 정부의 태도도 비교적 완화된 편임.
- 반대로 제한유형에 있어서는 외국측 출자인의 출자비율, 출자인의 자격 등 사항이 특별법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고, 설립절차에 있어서도 정부의 엄격한 심사·허가를 받아야 함.
- 금지유형은 말그대로 외국자본의 유입을 금지하는 업종임.
- 허가유형은 장려유형과 제한유형의 중간상태에 있는 업종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즉 허가유형은 중국정부가 외국자본의 유입을 환영도 안하고 반대도 안하는 업종.

3. 현지법인의 설립 절차

1) 설립절차



3. 현지법인의 설립 절차

1) 설립절차

- 현지법인은 공상국에서의 회사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영업허가증(즉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법률상에서 법인격을 부여받게 됨.
-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북경의 경우 현지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기간은 매우 순조로울 경우 약 2개월이나 약 3개월로 계획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임.
- 현지법인의 사업범위 내에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무위원회의 심사허가를 받기 전에 관할부서에 신청하여 특별허가를 받아야 함(前置審批).
- 예컨대, 현지법인이 외식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식품약품감독부서에 신청하여 <외식서비스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현지법인이 제3류 의료설비 판매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식품약품감독부서에 신청하여 <의료기계경영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함.

3. 현지법인의 설립 절차

2) 필요한 신청서류

➤ 상무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

- ① 승낙서
- ② 위임장 및 대행인의 신분증명서 복사본
- ③ 사업계획서
- ④ 출자인의 등기부등본 (자연인일 경우에는 여권 복사본)
- ⑤ 법인대표 유효증명서류 (자연인일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 ⑥ 은행잔고증명서
- ⑦ 사무실임대계약서 및 부동산권리증서 복사본
- ⑧ 임시명칭등기 통지서
- ⑨ 동사회구성원 리스트, 동사 임명장 및 각 동사의 여권 복사본
- ⑩ 정관 및/혹은 합자계약서
- ⑪ 외상투자기업 설립 행정허가 신청서
- ⑫ 상무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3. 현지법인의 설립 절차

2) 필요한 신청서류

➤ 공상국에 제출하는 서류

- ① 외상투자기업 설립 신청서 (기업설립등기 신청표, 출자인의 명부, 법인대표 등기표, 동사회구성원, 총경리, 감사의 임명장, 기업주소지 증명 등 서류가 포함됨)
- ② 정관 및/혹은 합자계약서
- ③ 상무위원회의 외상투자기업 심사허가증서
- ④ 출자인의 등기부등본 (자연인일 경우에는 여권 복사본)
- ⑤ 임시명칭등기
- ⑥ 공상등기 업무의 대행에 관한 위임장
- ⑦ 기업비서(연락담당) 등기표
- ⑧ 법률문서송달 수권위탁서
- ⑨ 공상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4. 현지법인의 출자형식

- 외상투자기업의 출자는 일반적인 경우 현금출자형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현물, 지식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화폐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법률 상에서 양도 가능한 비화폐재산으로도 출자할 수 있음.
- 단, 법률상 출자금지된 비화폐재산은 가령 평가 가능하고 양도 가능하다고 해도 이를 출자로 사용할 수 없음. 예컨데, 용역, 신용, 성명, 상업적 명예, 특수경영권,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 등.
-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경우에는 상응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중국 내의 자산 평가기구에 의뢰하여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단, 자산평가기구가 부동산으로 인해 그 평가 결과에도 큰 차이가 있기에 합자기업형태의 현지법인을 설립 함에 있어서 중국측 출자인이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경우에는 중국측 출자인이 일방적으로 선임한 자산평가기구에 평가업무를 의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면해야 함.

5.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

- “등록자본금”이란 외상투자기업 설립시, 공상행정관리국(공상국)에 등록된 자본금의 총액으로서 각 출자인이 외상투자기업에 납부할 것을 약정한 출자금액의 합계임.
- “투자총액”이란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규모에 비추어 투자할 필요가 있는 기본 건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총액을 말함.
-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과 차입금의 합은 투자총액을 구성함. 즉 외상투자기업의 차입한도금액은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이라고 볼 수 있음.
- 외상투자기업의 차입금액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중국정부는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의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 총체적으로 보면 투자총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등록자본금이 투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로 구분되어 있음.

5.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



- 투자총액이 300만달러 이하(300만달러 포함)의 경우, 등록자본금은 적어도 투자총액의 7/1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함.
- 투자총액이 300만달러 이상 1,000만달러 이하(1,000만달러 포함)의 경우, 등록자본금은 적어도 투자총액의 1/2 이상을 차지하여야 함. 단, 투자총액이 420만달러 이하의 경우, 등록자본금은 적어도 210만달러이어야 함.
- 투자총액이 1,000만달러 이상 3,000만달러 이하(3,000만달러 포함)의 경우, 등록자본금은 적어도 투자총액의 2/5 이상을 차지하여야 함. 단, 투자총액이 1,250만달러 이하의 경우, 등록자본금은 적어도 500만달러이어야 함.
- 투자총액이 3,000만달러 이상의 경우, 등록자본금은 적어도 투자총액의 1/3 이상을 차지하여야 함. 단, 투자총액이 3,600만달러 이하의 경우, 등록자본금은 적어도 1,200만달러이어야 함.

5.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

- 원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의 최소금액은 그 형태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RMB 3만원(출자인이 1인일 경우에는 RMB10만원)이고,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RMB 3,000만원임. 단, 2014년 회사법 개정에서 위 규정은 폐지됨.
- 특별법에 등록자본금의 최소금액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함.
- 심사허가부서(상무위원회)는 외상투자기업의 사업규모 등 요소를 고려하여 그 등록자본금의 금액이 안정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타당한 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때문에 등록자본금은 경영상의 실제 수요보다는 다소 많이 설정하는 것이 무난한 선택임.
- 세무부서는 외상투자기업의 규모에 근거해 납세자의 종류, 영수증 발행 한도액 등을 판단하고 있으며, 등록자본금은 기업규모의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되고있음. 따라서, 등록자본금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외상투자기업 설립 후의 세무 혹은 상업신용상의 사정도 고려의 범위에 넣는 것이 타당함.

6. 등록자본금의 납부

-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은 일괄 납부할 수도 있고 분할 납부할 수도 있음.
- 일괄 납부의 경우에는 외상투자기업 설립일(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등록자본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
-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외상투자기업 설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첫번째 출자금을 납부하고 또한 설립일로부터 2년 내에 나머지 출자금을 전부 납부하여야 함.
- 분할 납부에 있어서 첫번째로 납부하는 출자금은 등록자본금의 15% 이상이어야 하며, 법에 규정된 등록자본금 최소금액을 하회해서는 안됨.
- 외상투자기업이 그 업종, 사업계획 등 원인으로 인해 설립 당초의 생산,경영은 등록자본금의 일부분만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경우에는 상기 등록자본금 분할 납부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자금 사용효율을 제고할 수 있음.

7. 출자인의 책임한도

- 외상투자기업의 출자인은 자신이 인수한 출자금액을 한도로 외상투자기업의 채무에 대해 책임짐. 예컨데, 모 합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이 100만달러이고, 그중 한국출자인이 인수한 출자금액이 70만달러인 경우, 동 합자기업이 장래에 200만달러의 채무가 발생하였다 해도 합자기업에 대한 한국출자인의 책임은 70만달러를 한도로하며,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음.
- 단, 출자인이 외상투자기업의 법인성에 의한 독립적인 지위 및 출자인의 유한책임제도를 남용하여 채무를 도피하고 채권자의 이익에 현저한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론>이 도입되어 출자인이 외상투자기업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함.
- 예컨데, 독자기업에 있어서 출자인이 주주가 단 1인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독자기업의 자산을 전부 자신의 명의하에 이전하여 독자기업을 형해화 함으로서 채무를 도피하였을 경우, 독자기업의 채권자는 출자인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음. 단, 실무상에서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어 출자인이 연대책임을 추궁받은 사례는 극히 적음.

8. 합자계약의 내용

- 합자계약은 합자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중국측 출자인과 외국측 출자인이 합자기업의 설립, 출자, 경영, 청산, 분쟁해결 등 사항에 관한 상호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계약서로서 합자기업의 존속기간 중 가장 중요한 법률서류임.
- 합자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
 - 각 출자인의 명칭, 소재국, 주소지 및 법인대표의 성명, 직무, 국적
 - 합자기업의 명칭, 주소지, 목적, 경영범위 및 규모
 - 합자기업의 투자총액, 등록자본금, 각 출자인의 출차액, 출자비율, 출자방식, 출자납부일 및 출자 미납부의 경우와 지분양도에 관한 규정
 - 각 출자인의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의 비율
 - 합자기업 동사회의 구성, 동사의 인원 배분, 총경리, 부총경리 및 기타 고급관리인원의 직책, 권한 및 초빙방법
 - 도입하는 주요한 생산설비, 생산기술 및 구매처
 - 원자재의 구입 및 제품의 판매방법

8. 합자계약의 내용

- 재무, 경리, 회계감사의 처리원칙
- 노무관리, 급여, 복지, 노동보험 등 사항에 관한 규정
- 합자기업 존속기간, 해산 및 청산 절차
- 계약위반 책임
- 각 출자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및 절차
- 계약서에 사용되는 문자의 종류 및 계약효력 발생 조건

■ 용어해석

“동사회”는 합자기업의 최고권력기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일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임.

“동사”는 이사에 상당한 직위임.

“총경리”는 총지배인을 말함.

9. 합자계약의 유의점

■ 준거법

-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합자계약의 체결, 효력, 해석, 이행 및 그 분쟁 해결은 모두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야 함.
- 실무상, 합자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한국측 출자인은 장래에 중국측 출자인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의 이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존재하지만, 가령 중국측 출자인이 이에 동의하고 합자계약서에 관련조항을 설치하였다고 해도 실상 아무런 가치도 없음.
- 왜냐하면 이러한 약정은 합자계약 준거법에 관한 중국법의 강제규정을 위반하였기에 무효로 인정되기 때문임.

9. 합자계약의 유의점

■ 분쟁해결

- 합자계약 실무상, 한국측 출자인은 분쟁해결 절차에 있어서 중국측 출자인에 비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을 서울지방법원 등 한국법원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지만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 경내에서 이행되는 합자계약 관련 소송은 중국법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즉, 합자계약에 서울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규정했다 해도 중국측 출자인은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단, 중국과 한국은 상대국의 사법판결을 승인하지도 않고 집행하여 주지도 않음.
- 한국과 중국은 모두 <외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의 가맹국이기에 상대국의 중재기구에서 내린 중재판단은 승인하고 집행하여 주고 있음.
- 한국측 출자인이 중국 법원 혹은 중재기구에 의한 분쟁해결을 피면하려고 할 경우에는 한국 서울에 소재하여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을 관할 중재기구로 지정할 수 있음.

9. 합자계약의 유의점

■ 효력발생

- 일반계약서는 당사자가 서명, 날인함과 동시에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만, 합자계약은 이와 달리 당사자의 서명, 날일만으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심사허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단, 합자계약 체결 후, 각 출자인이 합자계약 관련사항에 대해 보충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보충계약이 원 합자계약 내용의 중대한 수정이나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한, 당해 보충계약은 심사허가부서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해도 출자인 간의 서명, 날인만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됨.
- 여기에서 일컫는 <중대한 수정이나 실질적인 변경>이라 함은 등록자본금, 회사유형, 경영범위, 경영기간, 출자인이 인수한 출자액, 출자방식의 변경, 합병, 분할, 지분양도 등 사항이 포함됨.

10. 부동산 인허가 기준

- 중국 진출 관련 투자정책은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고, 같은 지역이라도 부동산 행정구역에 의해 다른 경우가 있음.
- 사례:
 - 상호를 중문 숫자로 표기할 경우, 북경에서는 순조롭게 등록될 수 있지만 상해에서는 여러모로 애로가 존재 함.
 - 중외합자경영기업법(2001년 개정시행)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적 자연인은 합자기업의 출자인으로 될 수 없음. 단, 천진시, 중경시, 절강성, 하남성, 복건성 등 지역의 지방정책으로는 가능함.
 - 북경시에서 중외합자호텔관리회사를 설립할 경우, 동성구, 해전구 등 지역에서는 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허가가 필요없지만, 조양구에서는 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허가가 필요함.

10. 부동산 인허가 기준

■ 대응방안:

-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함 .
- 사전 법률조사가 매우 중요하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담당자의 답변이 시원치 않거나 헛갈릴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할 필요도 있음.
- 중국의 정책 및 법률제도 변화가 너무 빠르기때문에 과거의 인식이나 경험에만 멈춰있으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명기.
- 중국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는 법률상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과 실무상의 작법에 의한 검토의견 등 2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중국사회의 독특한 풍경.

11. 사무실 임대 관련 유의점



- 현지법인 설립 혹은 경영기간 중에 사무실 임대 관련 문제가 다발하고 있기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됨.
- 사례:
 - 북경 왕징 소재 모 한국독자회사(J사)는 중국사업의 확장을 위해, 원래 있던 사무실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금방 준공된 고급빌딩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함.
 - 계약체결 당시 사무실 부동산권리증서는 미발급 상태이나 부동산중개회사의 설명으로는 회사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
 - 그후, J사가 관할 정부부서에 등록주소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됨. 거절원인은 이사하려는 사무실이 부동산권리증서가 없기때문임.
 - 사무실 임대비용은 이미 6개월분 지불하였고, 원 사무실 부동산권리인도 등록주소 이전을 촉구하는 상황이기에 J사는 매우 난감한 처지.

11. 사무실 임대 관련 유의점

■ 대응방안:

- 임대 계약 체결에 있어서, 먼저 부동산권리증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중개회사나 건물주의 구두 약속은 신용하기 어려움.
- 부동산권리증서에 기재된 용도에 의해 회사주소로서의 등록가능 여부가 결정됨. 예를 들면, 상업용, 거주용, 상주양용 등.
- 임대계약에 기재된 사무실 주소는 반드시 부동산권리증서에 기재된 주소와 100%로 일치하여야 함.
- 예를 들면, 부동산권리증서에 기재된 주소는 "북경시 조양구 동삼환로 100호 A동 1008실"인데 임대계약서에 "북경시 조양구 동삼환로 100호 홍길동빌딩 A동 1008실"로 하면 등기 불가.
- 부동산권리증서가 있고, 또한 용도상 회사주소로서의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그 주소에 말소되지 않은 다른 회사의 주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12. 주재원 비자 관련 문제

- 현재 중국정부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관리를 상당히 엄격히 실시하고 있기에 파견된 주재원이 중국법을 위반행위로 인하여 비자 갱신이 안되는 케이스가 다발하고 있음.
- 사례:
 - 북경소재 모 한국독자기업의 주재원 김씨는 2013년 2월의 어느날 북경시 조양구의 술집에서 새벽 3시까지 음주 후 가지고 온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앞에서 달리던 승용차와 접촉사고 발생함.
 - 경미한 사고였지만, 상대방 중국인 기사는 김씨가 외국인일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RMB 5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였고, 김씨는 거절함.
 - 중국인 기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당장에서 김씨를 구속. 그 후 김씨는 2개월 구역형 판결을 받음.

12. 주재원 비자 관련 문제



- 2014년2월, 김씨는 북경시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본인 및 가족들의 비자 갱신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모두 거절 당함.
- 3일 후 김씨는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감.
- 중국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김씨의 인생은 크게 바뀌게 됨.

■ 대응방안:

- 중국의 국력강화, 외국인들의 중국법무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 등 원인으로 인해 중국정부의 외국인들에 대한 초국민대우는 자취를 감추고 있음.
- 중국에 파견되는 주재원들을 상대로 중국법 준수 및 생활안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